



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일본의 재정수지 개선 노력

최근 일본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대두되자 소비세율을 현행 5%에서 2015년까지 10%로 두 배 인상하는 데에 동의함.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러한 소비세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정 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지출구조 자체에 대한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.

- 지난 6월 16일 일본 여야는 소비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합의함.
 - 3당(민주당 · 자민당 · 공명당)은 현행 5%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%까지, 2015년 10월에 10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중의원 표결을 통해 가결함.
 -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이 1%p 인상할 경우 세수는 매년 2조 5천억 엔 증가하고, 5%p 인상할 경우 매년 12조 5천억 엔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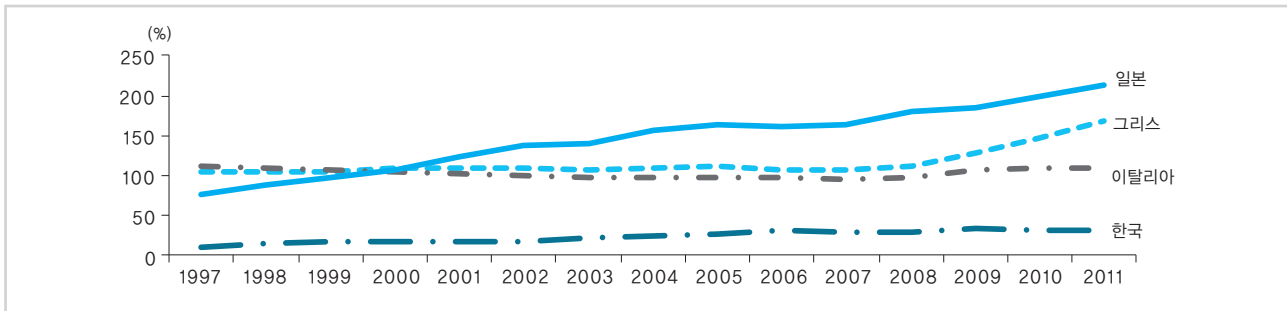
-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와 국제신용평가사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등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의 일환임.
 -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5월에 일본의 재정악화를 문제 삼아 국가신용등급을 'AA'에서 'A+'로 두 단계 강등하였으며, 무디스와 S&P도 소비세율이 인상되지 못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최근 남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봉착해 연이은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국가 채무관리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.

- 국제통화기금(IMF)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2011년 회계연도(2012년 3월말) 현재 959조 9,503억 엔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국내총생산(GDP) 대비 233%에 달하는 규모임.
 - 이는 유럽 재정위기를 유발한 그리스(167%)나 이탈리아(123%)보다 높은 수치임.
 -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재정적자가 평균 40조 엔에 달해 2012년 회계연도(2013년 3월말) 말에는 국가부채가 1,000조 엔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
- 일각에서는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.

- 일본의 경우 자국의 은행,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전체의 92%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은 유럽 국가들과는 사정이 다른 측면이 있음.
- 또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가계 및 기업의 소비 위축과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심화 등을 지적하며 소비세 인상 법안에 강력히 반대함.

〈그림〉 주요국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 추이



자료 : OECD

- 하지만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서, 일본 국채시장의 해외투자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일본도 점차 외부요인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.
 - 일본은행(BOJ)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해외투자자의 일본 국채 보유 규모는 76조 4,300억 엔으로 작년 말 대비 14조 3,000억 엔이 증가하였으며, 해외투자자 비중도 8.3%로 전년 대비 1.2%p 상승하여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음.
 - 더욱이 해외투자자의 일본 국채 매입은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에 집중되고 있어 시장에 충격발생시 급격한 자금유출이 초래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.
-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보유량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일본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여력은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.
 - 일본은행의 5월말 장기국채 보유액은 76조 3천억 엔으로 종전 최고치인 2004년 8월 말의 67조 3천억 엔을 갱신하여 본원통화의 82% 수준에 도달함.
 -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 창구로 쓰이는 것을 막고자 일본은행이 장기국채를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본원통화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,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에는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.
-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소비세율 인상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, 실질적인 재정 개선 효과를 이루기 위해선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효율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.
 - 일본은 연금·의료·노인요양 등 사회보장 3개 분야의 연간 지출액이 17조 엔이며 사회보장비의 연간 자연증가액은 1조 엔에 달하지만, 현행 소비세를 통한 순수 국가 세수는 연간 7조 엔 안팎으로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만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키기는 힘든 상황임. **KIF**